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06
----------	------

발의년월일 : 2020. 9. 25.

발 의 의 원 : 홍인표 의원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동식 의원

김원규 의원

김태원 의원

이만규 의원

정천락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다.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안 제8조)
- 마. 생태관광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불임

나. 관계법령 : 불임

다.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 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